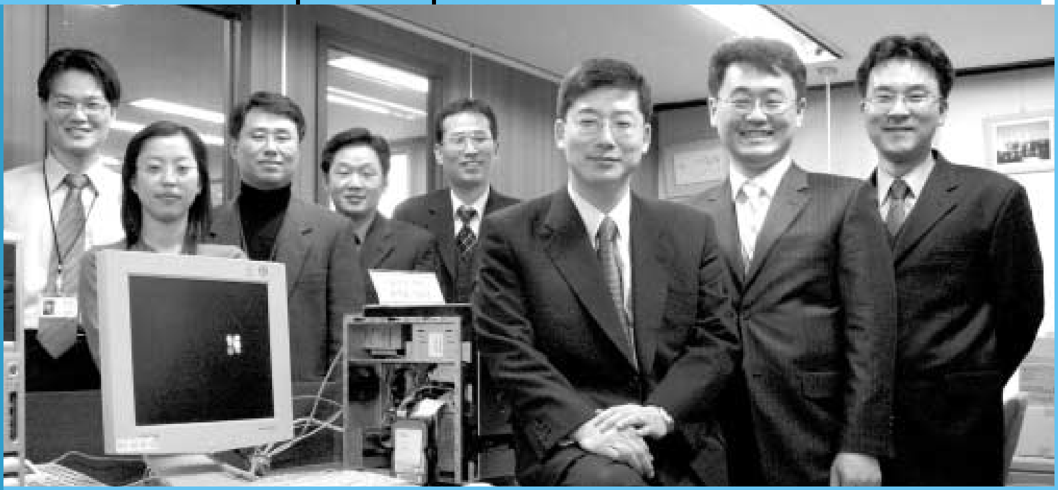
Venture 즐겨찾기

국부유출을 지키는 사이버 파수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지난 2000년 발족한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그간 사이버범죄에 맞서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해온 국내 유일무이의 첨단부서이다. 이 수사부는 지난 2월 1일, '첨단범죄수사부'로 확대 · 개편하여 대한민국 검찰의 과학수사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함은 물론, 빈발하고 있는 기업의 핵심기술유출 방지, 국부유출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유출 발생시 신고처

- 기술유출수사센터
  02-530-4877~8 (전담검사실)
- 인터넷사이트
  http://seoul.dppo.go.kr
  (첨단범죄신고란)
- 검찰청 신고센터
  국번없이 1301
  (인터넷 관련 범죄신고 2번)

첨단범죄 수사부 권장 기술유출 보호방안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사 내 개인저장장치 사용의 금지를 당연시 여기는 문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안장비가 충분해도 허점은 있는 법.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회사는 직원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한다는 운명공동체의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부패 척결을 위한 모든 업무 수행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해킹 등 사이버테러와 악성코드 배포, 스팸메시지 발송, 인터넷 불건전 정보 등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또 기술유출 범죄와 벤처비리 등 첨단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을 담당한다. 첨단부는 첨단범죄의 해결과 함께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 연구와 타 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첨단' 범죄에 맞서는 '첨단' 수사 일체를 처리하고 있는 최첨단부서이다. 첨단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범죄수법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하고, 최신 수사기법의 연구와 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른 수사부의 역할 변화

첨단부는 그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컴퓨터 범죄수사와 증거자료 압수 · 수색에 따른 수사지원,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지휘 등 정보화시대의 주요범죄인 사이버범죄를 중점적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첨단기술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기술의 중요성이 국가적 차원으로 인식되었고, 첨단기술유출 범죄가 첨단부의 주요업무로 자리잡게 되었다. 검찰도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대응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발족하여 사건 방지를 위해 힘써왔다. 이번 개편 역시 기술유출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첨단기법을 총동원한 첨단수사

첨단부가 파악한 최근의 기술유출 사례에 따르면 기술유출자는 기업의 핵심연구원 등 해당 기술에 이해와 접근이 용이한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유출되는 기술도 첨단이지만 기술의 유출 방법 또한 첨단기법을 동원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범죄수사부는 검찰 내에서도 정보통신과 컴퓨터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검사와 직원을 선발, 고도의 훈련을 통해 첨단범죄에 맞서고 있다. 첨단부 관계자는 "기술유출범죄수사는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증거분석기법이 핵심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기술유출을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